

# 도내 지방도시 주거상권 여건 마련 실행

### 김윤덕 국토부장관,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 추진, 지역 활성화로 잇는 사업 선정"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5일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쇠퇴에 의해 불편했던 전북 지역을 비롯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월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올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5·3특 실행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하였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

비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었고 서류접수(3월) 및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지방정부→국토교통부)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추어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후보지 포함)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

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HUG)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 신속하게 조성이 가능하다.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자치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자치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선정 전 도시재생지원기구(HUG)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행행

에 따른 신청 제한(60%미만) 등 평가 방식도 유지해 사업의 완성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일반장비형(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과 민집 정비형(4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건물 외부정비)과 그로리도텔링 사업의 연계(건물 내부정비 포함)를 통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하고 11일부터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 “통근버스는 직원 편의 지역 정착과는 별개 문제”

###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통근버스 운영 논란과 공단의 지역 정착 문제, 전주 금융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통근버스 운영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112개 지사에 약 7,7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큰 조직”이라며 “전주 본부에는 약 1,300명이 근무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2~3년 순환근무 후 다시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근무 직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발령을 받아 온 경우가 많아 주말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통근버스는 이런 직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조 요청에 따라 오랫동안 운영돼 온 제도”라고 말했다.

현재 통근버스는 수도권 노선 7대와 부산·대구 노선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은 노사 협약에 따라 공단이 지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개인이 KTX 등을 이용하려면 표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다”며 “노조와 협의한 통근버스는 최소한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통근버스 중단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전세버스 계약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노조 반발도 불가피하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중단을 검토하되, 대체 교통수단 마련과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 정착 저해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통근버스를 없앤다고 직원들이 가족이 있는 거주지로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 지원이나 개인 부담에 의해 차이가 있을 뿐, 통근버스 운영 여부가 전주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주율이 71.3%로, 다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농촌진흥청처럼 본사가 하나뿐인 기관과 달리 국민연금은 전국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이주율이 높은 편”이라며 “공단도 지역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통근버스 논란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금융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그는 “전주가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직원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전주에 사무소를 둔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인력 수급과 교통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정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현행 법률상 한계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통근버스 문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기여 전체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단의 전주 안착과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민주 이원택 의원 출판기념회

### 7일 전주대 슈퍼스타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축하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오는 7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자신의 저서 ‘이원택의 진심’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이 의원의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다가오는 민선 9기 전북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이 의원의 정치적 철학과 전북의 제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될 전망이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이 의원이 그동안 함께 길을 걸어온 도민과 국민에게 바치는 진실한 편지를 전달하는 소망의 장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원과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성치두 전 국회의원 출마자가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행정 통합, 시민 중심 공론정치로 완성”

### 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 통합 추진 원칙 제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증대된 분위기 속에 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행정 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시민 중심의 공론정치를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원과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성치두 전 국회의원 출마자는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이제 시민주권과 공론정치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비전이 일고 있다”며 “그동안 꺾이고 멈춰 있던 완주·전주 통합이 정치적 결단으로 증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과 갈등 속에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과거 통합 실패의 원인으로 행정 중심의 일방적 추진 방식을 지목했다. “선언에 머무는 행정과 밀어붙

이거시 통합 추진은 주민의 우려와 불신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번 도전 역시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전주시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주시정은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보다 행정적 선언을 앞세워 왔다”며 “행정적 주도권을 쥐고 통합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완주·전주 통합을 전북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5·3 3북 체제에서 전북의 소의 통합을 막을 최후의 보루”라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초광역 통합을 통해 대전권에 나서는 상황에서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만으로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산 직전이던 완주·전주 통합이 다시 부상한 것은 전북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세 출마 예정자는 통합 추진의 원칙

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통합의 중심은 결국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이어야 한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대화와 공론의 틀을 분명히 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독단적 행정이 아니라 민심에 기반한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며 “민위의 정당인 의회가 중심을 잡고 추진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는 통합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도 드러났다. 완주·전주 통합이 민선 9기 이후에 이뤄질 경우 전주시장직을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성치두 전 국회의원 출마자는 기자회견 후 마지막까지 남아 기자에게 “완주 후보들에게 경선 가점을 부여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주 후보와 경쟁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통합의 상징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 민주 이성운 의원, 8일

### 전주대서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전주시 을 국회의원이 이성운 의원이 오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성운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펼쳐 온 의정활동을 전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년 만에 다시 시민들 앞에서 국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널리 설명할 예정이다.

이성운 의원은 조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며 중앙 정치무대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주 출신 정치인이 당 지도부에 진입함으로써 전주의 정치적 위상과 발언권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과 동행이었던 전주출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역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전북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치러질 전망이다. /오만호 기자

## “경찰 불송치 결정... 수사 필요성도 없었다”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원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증거도, 수사 필요성도 없었던 사건”이라며 강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업체 당사자가 나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자신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어떠한 소환조사가조차 받지 않았다”며 “고소 내용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불송치 결정의 배경에 대해 나 의원은 “고소 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며 “첫 단계에서부터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 결과”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했다는 사실을 불송치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 나인권 도의원, 선거법

###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

그는 “고소를 해놓고 첫 조사 과정에서 끝바로 취하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저에게는 어떤 설명이나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나 의원은 이번 고소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고소가 제기된 시점과 자신의 김제시장 출마 선언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하필이 시점에 이런 고소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왜 고소 후 바로 취하했는지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후설과 기획설 조정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마치 제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됐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시민 여론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언론 보도의 영향으로 저에 대한 의혹을 받는 분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시민들이 점차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2천여 김제 시민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의 피부 사술 비용 대납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이제는 정성주 시장이 시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오만호 기자

##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공개

### 민주당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지방선거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 해당 내역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만호 기자



현행법은 후보자의 재산·병역·세금 납부 실적·전과 기록 등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공천 청탁이나 대가성 후원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만호 기자